■ 北 '행동조치' … 한반도 위기상황 치닫나

'물러설수 없는 남북' 우발충돌 우려

추가조치 내놓을땐 '대치구도' 심각해질 수 도

북측이 전날 발표한 '행동조치'를 26일 실제로 이행하고 나서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전날 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측의 '대북조치'에 대해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포함한 총 8개의 '행동조치'를 발표했다.

북측은 행동조치 가운데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 사업중단과 통신채널 차단, 남북 해운 당국 간 해사통신 차단 등을 이날 오전 10시께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

한시간쯤 뒤에는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하고 통일부 소속 우리 측 관계자 8명을 모두 추방했다.

북한은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경의선 및 동해선 군사채널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우리 측이 보낸 출입동의서를 군사채널을 통해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 국방부가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면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이 한층 드세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북측의 이 같은 경고에도 대북심리전을 예정대로 밀고 나겠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의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측 인력이 사실상 억류되는 '비상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대치구도가 남북이 발을 빼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측은 천안함 사태를 고리로 북측에 강력한 제재카드를 꺼낸 든 상황이고, 북측 역시 남측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기세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다시 한번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위협적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는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24일 발표한 정부 조치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남북은 당분간 서로 예고한 조치들을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위태위태한 남북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북측이 우리 측의 대북 심리전 재개에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남북 간 우발적 충돌로 연결될 수 있다.

북측은 전날 행동조치가 1단계임을 밝혀 추가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남북 간에 '쨍그랑'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남북이 현재 발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고, 우발적 충돌이 가장 우려된다"며 "우발 충돌 시 이를 계기로 남북 양측은 서로 자제하기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이려 함으로써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우리측 인원 8명이 추방된 26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모습. /연합뉴스

한·미 양국 '천안함동맹' 공식 확인

'대북제재조치' 가시화

한·미 양국이 26일 가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천안함 동맹'을 공식 확인했다.

천안함 사태를 한·미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공통의 대응기조를 다지는 계기였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들과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이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대응기조가 북한에게 실질적 고통을 가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압박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과거 부시 행정부때 완화 또는 해제됐던 ▲적성국교역법 재적용 ▲테러지원국 재지정 ▲애국법 301조 적용방안 등 다양한 금융·경제재제 조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이 검토 중이라고 밝힌 '추가적인 대응조치들과 권한'은 바로 이 같은 조치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하나의 포인트는 클린턴 장관이 천안함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투트랙'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이다. 클린턴 장관은 "천안함 침몰이라는 즉각적 위기에 대해 아주 강하고 계산된 대응책이 필요하며 좀 더 장기적으로 북한의 방향을 전환하는 대응책도 필요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두가지를 투트랙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핵화 협상을 위한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가 천안함 문제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만 앞으로 일정한 계기점을 맞을 경우 미국도 6자회담 재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천안함 국면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일단락될 경우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가에서는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추동하려는 중국측의 의지와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미·중은 24~25일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천안함 처리와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집중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2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을 상대로 최고위급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29~30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일이 공조전선을 펴며 중국측을 압박하는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전남도교육청 출신 교육관료 4명 후보 중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된 김장환 후보(왼쪽에서 네번째)가 26일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열린 단일후보 기자회견장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급변하는 도교육감 선거 판세

교육 관료 출신 결집 師弟·保革 대결 관심

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서 전남도교육청 출신 후보 4명이 단일화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선거는 김장환 단일화 후보와 장만채 후보간 '2강' 대결속에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과 곽영표 여수 정보화고 전 교장이 그 뒤를 추격하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관료 출신끼리의 단일화는 3만여 명에 이르는 '전남 교육가족'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커 향후 선거 판세도 요동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욱이 단일화에 성공한 김장환 후보와 선두권을 유지해 온 장만채 후보는 성향이 '보수'와 '진보', '초·중등 교육 전문관료'와 대학총장 출신' 등 이념과 교육철학·경력 등에서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들의 막판 선택이 주목된다.

◇교육 관료 출신 뭉쳐=2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에 성공한 김장환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으나, 신태학 후보와 지지도를 합하면 장만채 후보를 앞서는 만큼 당선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주장처럼 단일화에 합의한 후보 4명의 지지율 수치 합산이 단일화 후보의 지지율로 흡수될지는 미지수지만,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일보의 전남도교육감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장만채 후보가 20.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김장환 후보 7.2%, 김경택 후보 5.1%, 서기남 전남도교육위원 4.6%, 윤기선 전 전남교육연수원장·신태학 전 여수교육장 각 4.4%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단일화 후보 4명의 지지율을 모두 합하면 20.6%로, 선두 장만채 총장의 지지율과 같았다.

반면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투표용지 두번 째 자리에 이름을 올린 장만채 후보측은 단일화의 효과를 일축하며 당선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장만채 후보는 "전남교육청 관료 출신들의 단일화가 당선을 위한 도구가 아닌 전남교육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남 유권자들은 이미 어떤 인물이 교육감이 돼야 전남교육이 낙후를 털어내고 성장할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와 진보 엇갈려=김장환 후보와 장만채 후보는 광주일고의 '사제'간이면서도 성향은 뚜렷하게 엇갈린다. 장 후보의 수학교사였던 김 후보는 전남교육의 안정된 기틀 속에서 변화를 주장하는 보수성향이 강한 반면 시민단체의 추대를 받은 장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진보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 8년간 전남 교육계의 수장을 맡아온 김 후보는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대학교수 출신이 아닌 보통교육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 전문가'의 교육감 당선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순천대 총장 출신인 장 후보는 "낙후된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교육철학을 가진 새 인물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며 물갈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뚜렷한 성향과 정책의 차이점 때문에 유권자의 표심도 보수 지지와 진보 지지 등으로 양분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